



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협력

이 헌 규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10 월 29일~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중국·호주·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9개 회원국이 참가하며,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 10개국이 옵서버로서, 그리고 3개 국제기구(IAEA, OECD/NEA, EU)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아시아 원자력안전회의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 문제,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문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 협력 체제 문제, 그리고 원자력 사고시의 손해 배상 제도 등에 관하여 회원국들의 입장과 향후 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원자력안전회의에서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각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원칙적인 확인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인접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자 각국은 국내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와 국제 규범의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5년여의 노력 끝에 94년 9월 45개국이 서명한 「원자력 안전 협약」이 결실을 보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화되었다(96년 10월 협약 발효로 각국의 계약국 보고서 작성 등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의무화되었음).

또한 금년 9월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동시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개정 의정서와 국제 보충기금 협약안이 각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범지구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에 비해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IAEA 등 국제 기구에서는 각 지역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수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당 지역에 대해 권고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과거 오랜 기간의 상호 반목의 역사 때문에 원자력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도 각국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내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 그룹의 형성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각국의 원자력 산업의 추진 목적이나 규모, 그리고 기술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협력 증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안전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간 회의는 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발전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 회의를 사전에 개최하여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고, 국가별 Coordinator 또는 Contact Point를 통하여 수시로 관련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각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핵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사례들이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일본·한국·중국 등 아시아에서 원자력 사업의 선두에 위치한 국가들이 타국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원자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도 70년대 이후 미국·캐나다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독자적인 안전 규제 체제 확립, 기술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경험들은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발전했다고 본다. 각 나라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가 한·중·일 등 인근 국가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가하는 많은 나라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